

5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1절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274**

제2절 효과적 개발 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강화 **298**

제3절 전략적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333**

제4절 대외 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360**





DIPLOMATIC WHITE PAPER

제 1 절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1 유엔 및 국제기구 외교

1)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우리나라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2013~2014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13년에 이은 2년차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인 2014년 5월에는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 기념 고위급 공개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하는 등 비확산 분야 국제규범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크라이나, 남수단, 시리아 등 주요 국제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2014년 5월 안보리 의장국 수입 시 주요 활동

- 결의 5건, 의장성명 4건, 언론성명 13건 채택
- 결의
 - 2154호: 유엔 용맹상(Medal for Exceptional Courage) 제정(5,8)
 - 2255/6호: 수단 유엔 임무단 임무 연장(5,29)
 - 2157호: 기니비사우 유엔 임무단 임무 연장(5,29)
 - 2158호: 소말리아 유엔 임무단 임무 연장(5,29)
- 의장성명
 - S/2014/7: 결의 1540 채택 10주년 기념 WMD 비확산 지지(5,7)
 - S/2014/8: 중앙아프리카 내전 관련(5,12)
 - S/2014/9: 소말리아 무기 거래 금지 준수 환영(5,22)
 - S/2014/10: 레바논 민주적 선거 촉구 관련(5,29)
- 언론성명
 - SC/11380: 소말리아 테러 관련(5,4)
 - SC/11381: 예멘 테러 관련(5,5)
 - SC/11387: 나이지리아 테러 집단 보코하람의 여학생 납치 관련(5,9)
 - SC/11394: 중앙아프리카 내전 관련(5,13)
 - SC/11399: 아프가니스탄 선거 관련(5,15)
 - SC/11402: 기니비사우 관련(5,19)
 - SC/11404: 이라크 선거 관련(5,20)
 - SC/11406: 말리 북부 키달 지역 무력 충돌 관련(5,20)
 - SC/11411: 아프가니스탄 관련(5,23)
 - SC/11412: 소말리아 의회 테러 관련(5,24)
 - SC/11413: UNAMID 평화유지군 피격 관련(5,24)
 - SC/11418: 벨기에 테러 관련(5,28)
 - SC/11423: 중앙아프리카 관련(5,30)

이와 함께 소말리아·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및 안보리 결의 1540호 위원회(WMD 비확산) 의장국 등 안보리 산하 위원회 의장국 자격으로 국제 현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대통령의 안보리 정상회의 참석(2014.9.24)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Foreign Terrorist Fighters) 문제 대처와 관련하여 FTF의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철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반문명의 FTF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임을 요지로 발언하였다.

한편 안보리 공개토의 때는 본부 간부가 적극적으로 참석, 안보리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다.

※ ▲중동 문제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 참석(2014.1.20, 2차관)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 기념 공개토의(2014.5.7, 장관) ▲대테러 관련 고위급 공개토의(2014.11.19, 다자외교조정관)

2) 제69차 유엔총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4일 제69차 유엔총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하고 북핵·인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켰다. 이와 관련해 평화·인권·개발이 유엔의 비전이자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핵심 메시지에 관해 20여 명의 각국 정상 및 대사들이 직접 축

하 인사를 건네는 등 우리의 대외 정책에 대한 호응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기조연설 가운데 ‘국제평화’ 부분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포기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촉구하였다. ‘인권’ 부분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개발·교육·환경’ 부분에서는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및 2020년 신기후체제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교량 역할 수행 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지구촌 행복 시대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 기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 정상회의에 참석, FTF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사 관련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였다. 글로벌교육우선구상 지원국 대표로 행한 연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경험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교육의 미래 방향 설정에 기여하였다.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4.9.24, 뉴욕)

5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1절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2014.9.24, 뉴욕)

2 국제기구 진출

2014년에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ISA)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등 유엔 전문기구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국민의 유엔 사무국 내 고위직 진출도 두드러졌다. 강경화 유엔 인권부대표가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로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최초로 유엔에서 사무차장보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진현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이재섭 카이스트 교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표준화총국장, 정창호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각각 선출되었다.

3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 지원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입 등으로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 자질, 국제 감각을 갖춘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유엔 사무국 적정진출국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2014년부터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신규채용시험(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me)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와 유엔봉사단(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파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국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관련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1년 12월부터 매년 신규 파견되는 JPO 인원을 이전보다 3배 증가한 15명으로 늘림으로써 유능한 우리 인재들이 더욱 다양하게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 선발된 15명의 우리나라 JPO는 2015년부터 2년동안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사무국 등 10개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 분야 경력을 갖춘 인재를 파견하여 유엔 현장에서 전문가 수준의 봉사단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UNV 전문봉사단 파견사업과 함께 2013년부터는 더욱더 젊은 인재들에게 개발, 인권, 인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봉

사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청년봉사단 파견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문을 연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외교부 청사 1층)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는 물론 국제기구 채용 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운영과 이메일·전화·방문을 통한 각종 상담 제공,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 발간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외교부가 2014년 5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자원봉사단(UNV)의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제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서울대, 건국대, 연세대 및 부경대에서 연이어 개최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전국에서 약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관이 진행하는 모의면접 진행 등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생생하고 실질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14년 연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및 5차례의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는 17개 기구, 139명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여 년이 지난 2014년에는 총 45개 기구에 532명이 진출하는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이 세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고위직 진출 현황

직위	국제기구
이사/위원	유엔인권이사회(UHRC), 유엔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CESCR),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유엔분담금위원회, 세계기상기구(W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DROIT), 유엔국제법위원회(ILC), 국제해저기구(SA) 법률기술위원회,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수로기구(IHO) 해양법자문위원회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 등
기타 사무국 고위직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보 및 국장,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식량농업기구(FAO), 유엔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사회이사회(ESCA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유엔사무국 국별경쟁시험(YPP)

- 유엔에서 근무하는 정식 직원 수(지리적 배분 원칙이 적용되는 직위에 한함)가 재정분담금 규모 등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 2011년부터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을 유엔사무국 국별경쟁시험(YPP)으로 대체하여 실시
- 우리나라는 1992~2013년 YPP를 16차례 유치하여 그간 우리 국민 64명이 합격하였으며, 그 가운데 48명이 임용되는 등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진출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
- 2013년 12월 3일 시행된 YPP에 행정, 재정, 법무, 공보, 통계 등 5개 분야에 80여 명 응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에 1~2년 수습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규 직원 자격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 1996년 이래 2014년 말까지 133명의 JPO를 선발하여 UN, WFP, WHO, UNDP, UNV, UNEP, UNICEF, 유엔기후변화협약의회(UNFCCC),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IL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주요 국제기구에 파견
- 2014년 말 현재 파견기간이 만료된 JPO 73명 가운데 총 61명이 해당 국제기구 직원으로 채용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국제기구 인사센터 트위터(twitter.com/mofaUNrecruit)

국제기구 인사센터 페이스북(facebook.com/UNrecruit)

- 연중 수시로 국제기구 공식 정보 및 국제기구 진출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의 충실도를 높이는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진출 인프라 구축

4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은 무력 분쟁이 종식되어 평화 회복 및 안정 구축 과정에 있는 국가에 정전 감시, 무장 해제, 분쟁 재발 방지, 치안 유지, 전후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평화 및 안전 유지 지원 활동이다.

그 규모와 임무가 계속 확대되어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4,000여 명의 군·경 및 군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연간 예산도 유엔 정규예산의 약 2.6배인 8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7월 최초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상륙수부대)를 파견한 이래 PKO에 지속 참여, 지역재건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활동과 함께 치안 유지 및 평화 정착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를 파견한 가운데 우리 장병들은 현지에서 감시정찰, 재건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지원 등을 통해 주

재국 정부 및 현지 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재국 정부와 유엔 측 요청에 따라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14년 4월 유엔의 요청에 따라 여경 1명을 포함한 경찰 3명을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UNMIL)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에볼라의 위험도 무릅쓰고 라이베리아의 평화 정착 및 치안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파견 현황(2015년 3월 현재 634명 파견)

국가(유엔임무단)		부대 성격 및 규모	임무	최초 파견
레바논 (UNIFIL)	동명부대	보병부대(316명)	평화 정착 및 재건 지원	2007.7
	사령부 등	장교 4명		2007.1
남수단 (UNMISS)	한빛부대	공병부대(290명)	재건 지원 및 정전 감시	2013.1
	사령부 등	장교 7명		2011.7
인도·파키스탄(UNMOGIP)		장교 7명	카슈미르 지역 정전 감시	1994.11
라이베리아(UNMIL)		장교 2명	정전감시	2003.10
		경찰 3명		2014.4
수단 다르푸르(UNAMID)		장교 2명	평화 협정 이행 지원	2009.6
코트디부아르(UNOCI)		장교 2명	정전 감시	2009.7
서부사하라(MINURSO)		장교 4명	평화 협정 이행 지원	2009.7
총 계		군 병력 634명		
		경찰 3명		

5 인권·민주주의 증진에의 기여

1)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활동

우리나라는 2013~2015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6월, 9월의 정기회기와 중앙아프리카, 가자지구, 이라크 등 사태에 대한 특별 회기를 개최하였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2014년 한 해 동안 북한 등 42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였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인권 상황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4~5년 주기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활동

2013년 3월 제22차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2014년 2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북한 및 국제사회,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제시하였다.

2014년 3월에 개최된 제25차 COI의 주요 권고 내용을 반영한 북한인권 결의

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총회가 안보리에 COI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보리가 국제형사사법 메커니즘에 북한 상황을 회부할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조사위원회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여 북한 인권 상황 점검 및 책임 규명, 북한 인권 문제의 가시성 유지 등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에 우리나라는 EU, 일본, 미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 아래 2014년 5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요청을 수락하였다.

2) 유엔총회 등에서의 활동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는 논의를 거쳐 북한,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4개의 국별인권 결의를 포함하여 여성, 아동, 난민 보호 등 총 63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북한인권 결의는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라는 압도적 지지 아래 2014년 12월 18일 채택되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2005년 이래 최대 규모인 62개국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였다. 이 결의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의 책임자 선별 제재를 검토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2014년 12월 22일 ‘북한 상황’을 의제로 처음 채택(찬성 11, 반대 2, 기권 2)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였다.

3)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주요 모델 국가로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기여 노력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 참여, 지역 차원에서 발리 민주주의 포럼(BDF: Bali Democracy Forum) 참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Governing Council)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제7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윤병세 외교장관이 참석하여 민주화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비전(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시민교육 중시, 여성 참여 확대, 포용적 성장 추구 등)을 소개하는 등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여 왔다.

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

- 민주주의 확산, 민주주의 위협 공동 대응 등을 위해 2000년 창설된 범세계 민주주의 협력체

발리 민주주의 포럼(BDF: Bali Democracy Forum)

-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경험과 모범 관행 공유를 목적으로 2008년에 창설한 고위급 지역협력 포럼

4) 취약계층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외교 활동

우리나라는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인권 증진 경험, 대응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여성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주제로 2014년 3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58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고, 2011년 유엔 여성통합기구(UN Women) 출범 이래 집행이사국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등 양성 평등 및 여성 권한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2012~2014년 임기의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집행이사국으로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제11차 한·UNICEF 연례 정책협의회를 뉴욕에서 개최, UNICEF의 활동 지원을 위한 양측 간 협력 사항 및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제7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여,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생활 기준 확보 및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 등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오준 주유엔 대사의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직 선출(2015~2016년 임기), 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의 재선이 결정되었다.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가 2013년 10월~2014년 10월 1년 동안 유엔난민기구(U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집행이사회 의장으로서 난민을 포

함한 전 세계 보호대상자(persons of concern)¹⁾가 약 7,800만 명에 이르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 난민 보호를 위해 기여하였다.

6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이용한 비국가 행위자로의 확산방지 활동 주도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WMD)가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를 2004년에 채택한 이래 2014년으로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2013~2014년 안보리 1540위원회 의장국으로서 2014년을 ‘1540호 보편성 달성의 해’로 선정하고 WMD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주재한 2014년 5월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에서는 전 유엔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확보 등 1540호 결의 이행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 문서로서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외교부 주최로 안보리 이사국 및 아시아 지역 국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540 이행 강화를 위한 아시아 지역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 아시아 지역에서의 1540호 결의 이행 강화 방안 및 향후 과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 강화 기여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이어 2014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계속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핵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장섰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안보리 의장의 언론 발표(Press Elements)를 3월 및 7월 두 차례 도출하고, 2013년 7월 파나마에서 차단된 북한 청천강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WMD 확산 활동 관련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게 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기여하였다.

3)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공조 참여

우리나라는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기여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제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인 핵안보 정상회의가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회의의 성공 및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핵물질 안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등 전·현임 의장국과 함께 핵안보 이행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 특별연설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개 항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협력하여 2014년 11월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 워크숍’을 개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및 국제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2013~2015년 세계 핵테러방지지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이행평가그룹 조정국으로서 GICNT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서울에서 이행평가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8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 방안을 논의한 서울 이행평가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의 강화된 국제 핵안보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신동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최식 축사로 참석자들을 환영하였다.

한편 수년간 내전 상황에 처한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외곽의 구타(Ghouta) 지역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이후 시리아는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의 감시 아래 화학무기 폐기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시리아 정부가 신고한 화학무기 가운데 독성 화학물질의 폐기가 완료되었다. 우리나라는 OPCW 집행이사국으로서 재정 지원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검증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4) 아·태 지역 차원에서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 및 성과

우리 정부는 매년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UNRCPD: 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Pacific)와 공동으로 제주 국제 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12월 제13차 회의에서는 버지니아 감바(Virginia Gamba) 유엔 군축실(UNOD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부대표 및 애덤 샤인먼(Adam Scheinman) 미국 대통령 핵비확산 특별대표 등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북핵 문제, 이란 핵문제 등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 핵심 현안과 최근 군축·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살상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등에 관해 군축·비확산 측면의 합의 및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7 비전통 안보 국제 협력

1) 대테러 국제 협력

(1) 국제 테러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테러 대응 방향

지속되는 시리아 내전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불안을 틈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는 시리아 등지로 유입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급증, 인터넷을 통한 극단주의 선전 확산, 자생적 테러 발생 등 테러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적 법 집행 강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 체제 확립, 테러자금 조달 방지,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등 포괄적 대테러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인질 몸값 지불 방지, 외국인 테러 전투원 위협 대처, 테러리스트 제재 강화 등 각국의 유효한 대테러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 대테러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실업, 빈곤, 차별 등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경제·사회적 원인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의 극단주의 노출 방지를 목표로 하는 폭력성 극단주의 대응(CVE: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테러 행위를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동시에 테러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로는 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로는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대테러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유엔은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대테러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에 테러 관련 국제협약, 유엔 범세계대테러전략(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는 최근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된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 Foreign Terrorist Fighter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2014년 9월 24일(현지시간) 개최하고 FTF 이동 차단 등에 관한 결의 2178호를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37개국 정상 및 외교장관들이 참석, FTF 등 테러리즘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14개 국제 협약 가운데 13개 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알카에다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테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3) 양자 협력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주변국 및 우방국들과의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최근에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국과 최근 국제 정세 논의, 테러 정보교류 활성화, 위기 발생 시 상호 공조,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4) 국내 대응체계 정비

연간 1,500만여 명에 이르는 해외 여행객,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 국군 해외 파병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도 해외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정 불안 지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한 견고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테러 취약 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시설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관련 기관과 협력, 테러 위협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테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테러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합동 테러대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테러 위협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 참여

(1) 해적 관련 현황

해적 문제는 선박의 정상 항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연안 국가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 공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해적 공격 건수의 과반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소말리아 해적 공격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14년에는 11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한 수치로, 전 세계 해적 사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말리아 해적 공격의 급감은 아덴만 연합해군(17개국 24척)의 해적 소탕 활동, 무장 보안요원 승선, 선박의 철저한 해적 피해 대응 요령 이행, 국제사회의 지원, 소말리아 중앙정부의 안정화 기조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무장 해적들이 조직을 갖춰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연합해군의 활동 및 선박의 자구책 노력이 약화된다면 해적 공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위협 대응 노력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소말리아 해역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해역과 동남아시아 해역의 해적·무장강도 피해도 계속되고 있어 이 지역 해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2)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 참여

국제사회는 2008년부터 소말리아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08년²⁾, 2009년³⁾, 2010년⁴⁾, 2011년⁵⁾, 2012년⁶⁾, 2013년⁷⁾, 2014년⁸⁾에도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이들 결의에 근거하여 외국 군함이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여 해적 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연합해군(CMF: Combined Maritime Forces)의 대해적 군사 작전이 조직을 갖춰 운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운국가로서 해적 예방 및 퇴치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08년 등 주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우리 군함(청해부대)을 파견하여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을 보호하고, CMF의 일원으로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청해부대는 2015년부터 EU CMF의 대해적 작전에도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에 따라 2009년 1월 창설된 소말리아해적 퇴치연락그룹(CGPCS: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CGPCS는 세계 60여 개국과 국제기구 및 해운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 활동 조정, 연안국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소말리아 해적 근

- 2) 제1816호(2008.6.2): 해적 퇴치를 위한 외국 정부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승인(6개월간)
제1838호(2008.10.7): 소말리아 인근 공해 해역에 유엔 회원국의 군함·군항공기 파견을 요청
제1846호(2008.12.2):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제1851호(2008.12.16):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1년간)
- 3) 제1897호(2009.11.25):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 4) 제1918호(2010.4.27): 각국 국내법에 따른 해적 사법 처리 방안 검토
제1950호(2010.11.23):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 5) 제1976호(2011.4.11): 소말리아 밖 제3국에의 특별법원 및 교도소 설립 고려
제2015호(2011.10.24): 각국 국내법상 해적 행위 범죄화 및 기소 촉구, 소말리아 해적 특별법원 설립 논의
제2020호(2011.11.22):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 6) 제2067호(2012.9.18): 신정부 수립에 따른 관해적 제도 강화
제2077호(2012.11.21): 외국 및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허용 연장(1년)
- 7) 제2125호(2013.11.18): 외국 및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허용 연장(1년)
- 8) 제2184호(2014.11.12): 외국 및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허용 연장(1년)

절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임기의 CGPCS 제3작업반 의장직을 수임하여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우리는 2011년~2014년 CGPCS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GPCS 회원국 간 소통 강화 및 일반 대중의 해적 퇴치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고, 국제해사기구(IMO) 지부티강령 신탁기금에 총 50만 달러 및 소말리아 해적 퇴치신탁기금에 총 7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소말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사법·치안 역량 강화를 통한 해적 발생의 근본 문제 해결에도 공헌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통상 소말리아 내 경제 성장 기회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 법치 부재 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긴밀한 공조 체제 아래 관심을 지속 기울여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다방면에서 기여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3)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 협력

2014년 12월에 발생한 미국 SONY 영화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공격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보여 준다.

미국은 SONY 영화사 사이버공격과 관련해 ▲악성코드 기술 분석 결과 ▲악성 행위활용 기반 시설의 유사성 ▲2013년 한국 금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과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공격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하고 규탄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탄했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외교 차원의 효과 높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의 노력을 확대하였다. 양자 차원에서는 미국, 러시아와의 양자협의회에서 다양한 사이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년에는 유럽연합(EU), 호주와의 양자 협의회를 신설하였다. 소다자 차원에서는 한·일·중 정책 협의회가 사이버 동북아 지역의 사이버 이슈 전반에 대해 논의 가능한 고위급 회의로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2차 회의는 2015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자 차원에서는 유엔(U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지역협력체에서의 사이버 관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유엔 차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주요 논의는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내 국가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GGE는 2013년 결과 보고서에서 현장을 포함한 기존의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14~2015년 GGE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브라질 전문가가 의장을 맡고 있다. 제1차 회의는 7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결과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된다.

우리 정부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양자, 소다자, 다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 2 절

효과적 개발 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강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난민·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 전 지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국제사회는 2000년 이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MDGs 달성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장과 고용, 식량안보 등 새롭게 대두된 개발 이슈 등을 고려한 ‘2015년 이후 개발 체제 구축(Post-2015)’에 관한 논의가 유엔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견국으로서 이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이를 통한 기여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원조효과성 분야 최고 규범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논의를 주도하며 ODA

규범 형성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G20 개발그룹의 주도 국가 역할을 수행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긴급구호대 등을 파견하였다.

Post-2015 개발 의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인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협력 체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로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2016~2030년의 새로운 국제 개발 목표와 이행 체제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증여는 개도국에 상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무상자금공여, 양허성 차관은 상환 의무를 부과하지만 조건이 완화된(증여율 25% 이상) 융자이다. 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로 각각 불리기도 한다.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 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개발 분야 목표 이행을 위해 2001년 9월 유엔이 채택
- MDGs는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개 주요 목표, 21개 상세 목표, 60개 달성 지표로 구성
- MDGs 8대 목표
 -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③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④ 유아사망률 감소 ⑤ 모성 보건 증진 ⑥ 에이즈 등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 ODA 규모 지속 확대 추진

우리나라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8억 5,000만 달러의 ODA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양자원조가 13억 9,100만 달러(75.0%),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4억 5,900만 달러(25.0%)였다. 양자원조 가운데에서는 무상원조가 8억 7,900만 달러(63.2%), 유상원조가 5억 1,200만 달러(36.8%)를 각각 차지하였다.(2014년, 순지출 기준)

우리 정부는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G20 개발 의제 주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등 국제 개발 협력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는 계속되는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일부 공여국이 ODA 규모를 줄여 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순 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분	1987-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잠정	총계
공적개발원조(ODA)	6,566.3	1,173.8	1,324.6	1,597.5	1,755.4	1,850.7	14,268.1
① 양자 간 협력	4,315.5	900.6	989.6	1,183.2	1,309.6	1,391.4	10,089.9
· 무상원조	2,567.6	573.9	575.0	714.9	809.0	879.4	6,119.8
· 유상원조	1,748.0	326.7	414.6	468.3	500.6	512.0	3,970.1
② 다자 간 협력	2,250.7	273.2	335.0	414.3	445.8	459.2	4,178.2
ODA/GNI(%)		0.12	0.12	0.14	0.13	0.13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014년은 실적보고용

2 ODA 선진화 기반 강화

1) 통합적 ODA 지원 전략 및 체제 수립

(1) ODA 통합정책협의회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효율적인 개발협력 사업 조정 및 시행을 위해 개도국 협의차원의 조율을 강화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정책협의회를 개별 실시해 온 동남아국가 대상의 무·유상 ODA 통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부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베트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베트남 선례에 따라 무·유상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수석대표를 교차 수입하여 개최하였다. 2014년에는 베트남(8차), 미얀마(3차), 캄보디아(1차)에서 통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합 관리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시행 기관들이 ‘ODA 선진화 방안(2010.10월) 및 2011~2015년 분야별 기본계획(2010.12월)’에 따른 일관된 전략 아래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1년 이래 매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관계기관과 다음 해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는 30여 개 기관(부처, 위원회, 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무상원조 주관 기관인 외교부는 이들 참여 기관이 다음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1,000여 개의 무상원조 사업을 검토, 연계, 조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의 분야별·형태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농업·보건·교육·공공행정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개발컨설팅·초청연수·해외봉사단 등 형태별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부처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 ODA의 질적 제고 기반 조성

(1)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체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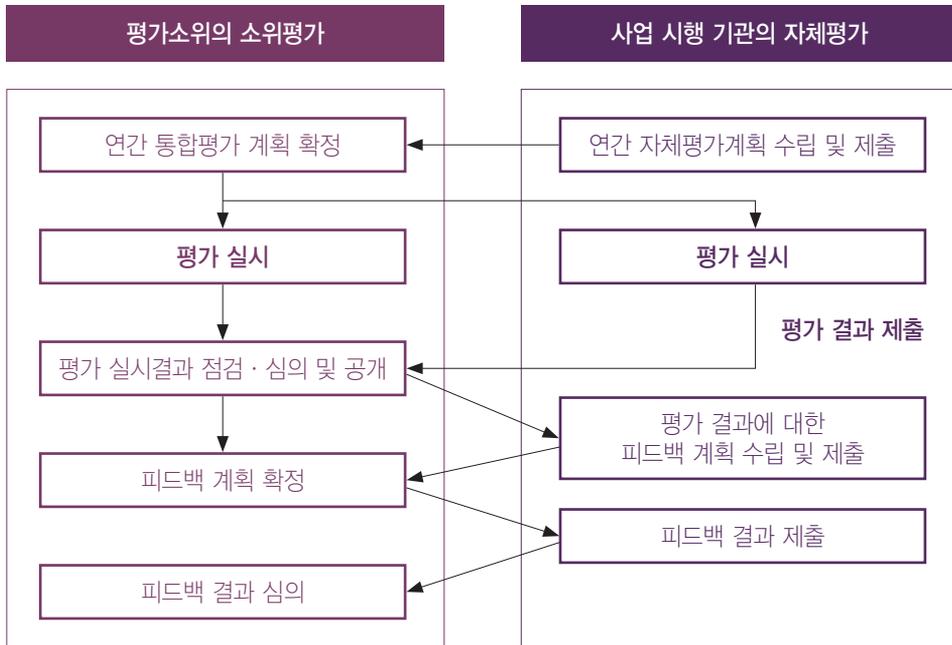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성과 측정 및 효과 제고를 위해 2009년 5월 국제 기준에 맞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10년 시범통합평가 후 2011년부터 통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통합평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모든 시행 기관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제출 및 결과 보고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통합평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통합평가의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다.

통합평가 체제에서는 각 시행 기관이 소관 사업에 관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가 ODA 통합 추진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객관성을 담보한 제3자의 평가를 실시하는 '소위평가'가 동시에 진행된다.

2014년에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3월)에서 의결된 2014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소위평가 4건(▲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수자원 분야 ODA 통합평가 ▲교육 분야 ODA 통합평가 ▲성 인지 관점에서 ODA 사업 평가), 자체평가 80건 등 총 84건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평가 결과 및 제언 사항에 대한 환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구축을 통한 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2) 원조 투명성 제고 노력: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준비

우리 ODA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국회, 시민사회, 학계 등으로부터 ODA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대하였다. 또 OECD, 유엔 등 국제사회는 원조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공여국의 ODA 투명성 향상을 지속 권고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4년 3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추진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를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는 공

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여 ODA 관련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증진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2008년 아크라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에 기반을 두고 2009년에 출범하였다. 현재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59개 공여국 및 기관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IATI 가입으로 ▲ODA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OECD/DAC 동료검토(Peer Review) 시 제시된 정보 제공 권고 이행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공약 이행의 효과 등이 기대된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문서 23항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 개발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자원들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보에 대한 전자 공개를 위해 국제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OECD-DAC 통계 보고 및 국제원조투명성 기구(IATI)와 다른 보완 보고 체계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이 기준은 개발도상국 및 주요 비국가 주체들의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2012년 12월까지 이 기준에 합의하고, 각자 이 기준의 시행 일정을 공개하여 2015년 12월까지 전면 이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우리 정부의 IATI 가입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원조시행기관(KOICA, 수출입은행)이 IATI 운영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3월, 10월)하고, 4월에는 외교장관이 멕시코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IATI 가입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5월에는 IATI 기술지원팀을 초청하여 KOICA/수출입은행과 양자 협의 및 관계 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조실, 외교부, 기재부,

KOICA, 수출입은행으로 6월에 구성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명확한 가입 시기, 정보 공개의 범위와 수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3) 선진공여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외교부는 개발 협력 분야 선진공여국과의 양자 개발 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 파트너십 확대를 도모하였다.

(1) 한·UAE 개발 협력

2014년 1월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 주요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제1차 개발 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국의 ODA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Post-2015 개발 의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안 등을 논의하였다. 2월에는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계기로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 공동 연구, 인사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 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 양자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2) 한·EU 정책협의회

2014년 3월에는 전 세계 원조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세계 제1위 공여국이자 주요 개발 어젠다를 주도하는 EU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자 간 개발 협력 분야 경험 공유 ▲개도국 내 협력 사업 모색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Post-2015 개발 의제 등 주요 글로벌 개발 이슈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3) 한·미 개발 협력

우리 정부는 단일국가 기준 세계 최대 공여국인 미국과도 2011년 한·미 개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KOICA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KOICA-USAID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나 및 에티오피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미국의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아프리카 전력개발 부문 협력, 개발 관련 국제공모전인 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참여 등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4) 한·호주 개발 협력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서울에서 아·태 지역 주요 파트너인 호주와 제3차 개발 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Post-2015 개발 의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G20 개발그룹 등 세계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한·캐나다 개발 협력

2014년 5월 우리나라는 세계 제9위 ODA 공여국인 캐나다와 제2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양국은 ▲양국이 ODA를 제공하는 개도국 내 공동협력사업 등 협력 방안 모색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Post-2015 개발 의제 등과 같은 주요 세계 개발 이슈에 관한 의견 교환 ▲개발 협력의 새로운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양국 간 경험 공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양국 ODA 시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옛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은 2012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후속 협의체로 발족해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수원국·신흥국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민간, 의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총회 합의 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

(6) 한·비세그라드펀드(IVF) 간 협력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이루어진 비세그라드그룹(V4)은 상호 간 협력 및 주변 지역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2000년 비세그라드펀드(IVF: International Visegrad Fund)를 설립하여 동유럽 및 발칸 지역 국가들에 V4의 체제 전환 및 EU 통합 경험을 전파할 목적으로 공동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체코 개발협력 정책협의회(6월) 때 IVF 사무국장을 면담하여 한·IVF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7월 한·V4 외교장관회의 때 외교부·비세그라드펀드(IVF)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MOU는 IVF 추진사업 가운데 서발칸 국가(Western Balkans)¹⁾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환기에 있는 서발칸 국가들의 ▲역내 협력 촉진 ▲인간 안보 증진 ▲시민사회 및 교육 역량 강화 추진 지원을 위해 33만 6,000유로를 기여하였다.

1) 서발칸 국가(Western Balkans):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등 6개국

(7) 한·영 정책협의회

2014년 12월에는 세계 2위의 ODA 공여국이자 유엔의 권고 사항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한 영국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2015년 개발 분야 주요 정책 과제 공유 ▲Post-2015 개발 의제 및 개발 재원 ▲ODA 현대화 ▲에볼라 등 국제 위기 대응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국제 이슈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에볼라 발생 국가인 시에라리온에 우리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경험을 기초로 양국 간 국제 이슈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ODA 정책 및 이행 외부 평가: ODA 독립패널 활용

우리나라 무상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객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4월 외부인사로 구성된 ‘ODA 독립패널(이하 독립패널)’이 출범하였다. 개발 협력 및 국제 문제 전반에 있어 전문가인 13명의 패널 위원들(위원장: 김성환 전 외교장관)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ODA 정책과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무상원조 발전을 위한 20개의 정책 제언을 담은 「독립패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원조를 대외정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문서’의 마련 ▲무상원조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 채택 ▲개발 협력의 현안과 정책을 연구할 국제개발협력정책연구원(가칭) 설립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인력 및 조직 확충 ▲KOICA의 글로벌 원조 기관화 등을 통해 무상원조의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중견국 외교를 확대 실현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들 정책 제언의 이행을 위해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 독립패널'과 같은 외부 평가를 정기로 진행할 계획이다.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OECD DAC 가입, ODA 예산 확대 등 국내외 개발 협력 환경 변화에 능동으로 대응하고, 모범 공여국으로서 수준 높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상 원조 집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월 'KOICA 선진역량 강화방안 및 구체이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4대 이행 과제로 ▲세계 수준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스템 정비 ▲선진형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외 파트너십 확대를 선정, 모범·선진형 개발협력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월에는 경영 측면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KOICA 차원에서 'KOICA 조직경영 혁신 계획'을 수립, 이행함으로써 공공기관 개혁 과제의 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데 모범을 보이고 있다.

'KOICA 선진 역량 강화 방안' 이행 과제 추진 실적(2014년 12월 현재)

- 단기 과제 총 31건 가운데 31건 완료
 -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 세부시행지침 개정, 사후관리 기준 수립
 - 현장 주재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기준 정비
 - ODA 조달상담센터 설치 및 신속한 입찰 결과 안내 서비스 구축
 -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 사전자문검토 제도 도입
 -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 관련 근무평정 규정 개정 등

- 중기 과제 총 19건 가운데 16건 완료(3건 추진 중)
 -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ODA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ODA 통합정보센터' 구축 착수
 - 개발인증 시스템을 통한 개발 협력 전문가 양성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외교부 ODA 독립패널 보고서(2014.11.20) 요지

- 대외 전략을 고려한 원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필요성 제기
- 외교부의 원조정책 역량 강화 및 정책 싱크탱크 설립 제안
- 외교부 무상원조 정책과 KOICA 집행 간 연계를 위한 효율적 협업과 분업
 - KOICA의 원조사업 집행 관련 자율성 강화 및 외교부의 KOICA 사업 모니터링·평가 기능 강화
 - KOICA를 글로벌 원조 전문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속
 - 경영 및 사업 혁신 지속, 전문성 갖춘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계획 수립, KOICA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웃소싱 확대 및 원조조달법 채택 등

3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의 선도 역할 수행

1) 2015년 이후 국제 개발 체제 구축에 참여

새천년 개발 목표의 달성 시한인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새 천년 개발 목표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이를 대체하는 차세대 국제개발목표(일명 'Post-2015 개발목표') 수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2015년 이후 개발 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는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설정 및 이행(Delivering on and Implementing a Transformativ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참석 국가들은 지난 15년간의 새천년개발목표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가 간 협상 과정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발 의제 도출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이번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천명하였다.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

또한 우리 정부는 2014년 12월 유엔 Post-2015 정부 간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중점 의제 발굴 및 전략 수립을 위해 ‘Post-2015 범정부 TF’(외교부 제2차관 주재)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 TF 산하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운용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국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주도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출범 시 집행위원회 공여국 대표로 선출된 이후 국제사회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원칙을 준수하여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을 주도하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4대 원칙

①수원국 주인 의식 ②결과 중심의 개발 협력 ③포용적 파트너십 ④투명성과 상호책임성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연례국제회의
(2014.11, 서울)

을 소개하고, 부산 공약의 체계를 갖춘 이행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한국이 국제회의와 연수 프로그램을 연례 행사로 개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에는 국제기구 및 정부 고위관료, 시민사회 및 학계 전

2014년 4월 15~16일 이틀 동안 멕시코에서 개최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사, 정부 장관급 인사, 개발 분야 고위 전문가 등 약 130개국 1,5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전략 방향성과 부산 총회 공약 이행 촉진을 위한 세부 행동 계획을 집약한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외교장관이 참석하여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4대 원칙 이행 노력

문가, 기업인 등 15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연례국제회의를 서울(이화여대)에서 개최하여 부산총회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Post-2015 개발 체제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방안을 모색한 한편 개도국 현장에서의 개발효과성 원칙 적용 현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연례국제회의와 연계하여 KOICA에서 개최된 개도국 관료 대상 연수 프로그램은 부산총회 공약과 10대 모니터링 지표 교육을 통해 개도국의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 체제

구분	주요 내용
운영체제	①장관급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담당 • 부산총회 결과문서를 승인한 모든 국가 또는 기관이 참여 *현재 약 161개 국가, 56개 국제기구 및 기관이 부산총회 결과문서 승인 • 18~24개월 주기로 개최, 유엔 개발협력포럼(DCF) 등 여타 고위급 회의와의 연계 개최 검토
	②집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회의 의제 준비 등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질 운영 담당 • 글로벌 파트너십의 참여 주체 대표 21명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공여국 대표로 선출(임기: 최대 2년, 장관급 회의 개최 주기 18~24개월과 연계)
	③OECD-UNDP 공동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파트너십의 사무국 역할 담당 - OECD(글로벌 모니터링 및 정책 분석)와 UNDP(개도국 현장 사무소)의 비교우위를 살려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지원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총회 주요 공약 및 합의 사항 이행 점검 - 글로벌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를 전략 차원에서 선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부산 글로벌 지표 선정 - 원조효과성 심화 지표: 수원국 시스템 활용, 비구속화, 원조 예측성(중단기), 투명성 등 - 개발효과성 신규 지표: 개도국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시민사회 참여, 민간 분야 역할, 양성 평등 등
	참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원국 및 공여국에 따라 이행 지표 구분 - 특히 남남협력국(중국 등)은 자국의 능력 및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가능

3) G20 개발 의제의 이행

우리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G20 개발의제(‘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 채택을 주도하였다.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발 전망(Development Outlook)’은 기존의 10개 분야를 5개 중점 분야(인프라, 식량안보, 인적자원 개발, 금융 소외계층 포용/국제 송금, 국내 재원 조성)로 간소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분야의 공동 조정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2014년 G20 정상회의(11.15~16, 호주 브리즈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저소득국 및 개도국의 빈곤 퇴치, 개발, 포용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경제 복원력 강화라는 G20 차원의 노력을 통하여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합의 노력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개발국가이던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음을 소개하고 G20과 개도국의 상생 및 동반 발전을 위해 개발 의제를 2015년 G20 정상회의 때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개발실무그룹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동조정국으로서 G20의 정책 제안이 개도국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2014년 7월 국제노동기구(IL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모잠비크와 네팔에서 직업기술교육 역량 강화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모잠비크의 지역경제 고용 창출, 네팔의 청년 고용 증진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수요에 맞는 직업기술 교육훈련 기관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4) OECD 개발 논의 참여

Post-2015 개발 체제 출범을 앞두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4년에 ODA 개념 현대화를 위시한 개발 재원에 관한 논의에 주력하였다. 저금리 기초, 개발 주체 및 재원의 다변화 등 변화한 국제개발 협력 환경에 부합하도록 1972년에 확정된 ODA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DAC에서는 차관의 ODA 측정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과 ODA 이외의 포괄적인 개발 재원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한국은 개발 자원·통계작업반 회의(3,4,6,9월), 고위관리회의(3,10월)에 참가하여 DAC에서 진행되는 개발 자원 논의가 ODA 수원국의 혜택과 공여국의 노력을 균형있게 측정하는 동시에 ODA 통계의 일관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DAC 각료급회의(우리 수석대표: 외교부 제2차관)에서 40여 년 만에 ODA 측정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는 차관을 제공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한편 재정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국이 나 최빈국에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의 공적개발 재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DA 이외의 포괄적 개발 자원 측정 방식, 평화 및 안보 지원 활동의 ODA 인정 범위, ODA의 민간 개발 자원 레버리지 효과 측정 방식 등 2015년에도 DAC 차원의 개발 자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며, 한국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5) 새마을운동의 국제 농촌개발사업 모델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75%가 개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

분이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극빈층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은 매우 중요한 개발 대상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도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주요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농업 분야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를 승계할 Post-2015 개발 의제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주요 의제로 포함되는 등 농업 개발과 농촌 지역 사회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농촌 개발 성공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협력국가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개발 모델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OECD, UNDP,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개도국 농촌 개발 표준 모델로 정립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새마을운동 협력 사업 추진 현황

- 한· OECD 새마을운동 공동 연구(2014~2015년)
 -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역개발 정책 모델로 이론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사업 추진 중
- 한· UNDP 새마을운동 협력 사업(2014~2017년)
 - 개도국 현장에 적용 가능한 농촌 개발 모델로서의 새마을운동 사업 이행 지침 수립 및 시범 사업 실시
- 한· WFP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사업 추진(2011~2015년)
 - 우리나라의 1970년대 농업생산성 증대 정책 등 개발 경험 성공 사례를 활용, 개도국 농업 생산성 제고를 지원

4 양자 및 다자 개발 협력 내실화

1) 양자 개발 협력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무상원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원조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출범 이후 원조 규모를 지속 증대시켜 오면서 2014년에 5억 5,100만 달러(잠정)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지역별로 우리나라와 지리상으로 가깝고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아시아 지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빈개도국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개발 목표인 MDGs 달성에 중요한 아프리카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양자 원조의 약 47%를 아시아 지역에 배분하였으며, 아프리카에는 20% 이상을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지원을 집중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전체 양자원조 예산의 약 60%를 지원하였다.

분야별로는 수원국의 수요와 개발 계획에 맞춰 양자원조의 약 50%를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배분한 가운데 나머지는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지역별 지원 규모

(단위: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ODA 지원액					양자 ODA 중 비중(%)				
	2010	2011	2012	2013	2014 잠정	2010	2011	2012	2013	2014 잠정
아시아	552.9	583.9	637.7	731.1	654.5	61.4	59.0	53.9	55.8	47.0
아프리카	139.9	178.3	261.0	271.7	331.1	15.5	18.0	22.1	20.7	23.8
중남미	64.5	64.4	76.2	96.5	109.0	7.2	6.5	6.4	7.4	7.8
중동	34.3	41.3	42.3	40.6	74.6	3.8	4.2	3.6	3.1	5.4
유럽	38.7	20.7	16.6	2.6	9.9	4.3	2.1	1.4	0.2	0.7
오세아니아	5.6	4.2	3.4	3.9	7.6	0.6	0.4	0.3	0.3	0.5
지역미배분	64.7	96.8	146.1	163.2	204.7	7.2	9.8	12.3	12.5	14.7
합계	900.6	989.6	1,183.2	1,309.6	1,391.4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014년은 실적보고용

(1) 아시아 지역 개발 협력

우리 정부는 지리 접근성 및 문화 친근성 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아시아 지역을 우리 ODA의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빈곤 정도와 발전 단계를 종합 고려하여 2014년 아시아 지역(오세아니아 포함)에 관해 전체 양자 지원액의 47.6%에 해당되는 6억 6,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의 주요 협력 대상 지역으로, 아시아 무상 원조의 약 50%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농촌개발, 과학기술, 정책결정 역량 강화 부문을 집중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자립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IAI) 지원 및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한 협력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남아시아는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ODA의 약 30%를 차지하고, KOICA 무상원조 지원 규모 상위 20개국에 서남아시아의 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이 포함되는 등 우리 ODA의 주요 협력 대상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44%가 서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등 개발 수요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등 4개국을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2) 아프리카 지역 개발 협력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최빈개도국이 집중되어 있고, 각종 질병 및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가 장애물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자립 경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둔 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아래 우리 정부가 대아프리카 무상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등 아프리카는 무상원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기도 하다. 양자 ODA 가운데 아프리카의 비중은 2011년 18%, 2012년 22%, 2013년 20%, 2014년 23%(잠정) 등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약 3억 3,100만 달러(잠정)를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산업 인프라 개선 ▲보건위생·의료 환경 개선 ▲농업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대아프리카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2012년까지 대아프리카 ODA를 2008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하기로 한 약속을 지킨 바 있다. 2012년에는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서울선언 2012’와 ‘실천계획(Action Plan)’을 채택,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아프리카 비구속성 원조 및 개발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3) 중남미 지역 개발 협력

중남미는 약 80%의 국가가 중소득국 또는 고중소득국으로 분류되지만 국가·지역·인종 간 소득불균형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소득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루 소득 1달러 50센트 미만의 극빈층도 약 12%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절대빈곤 및 사회 불평등 감소를 통한 중남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 보건 서비스 확대, 치안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자 원조의 10%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순지출 기준으로 약 1억 900만 달러를 중남미 지역에 지원했다. 이는 양자원조 가운데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한정된 ODA 예산의 효율 집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를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빈곤층 중심 성장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정부공공행정 역량 및 투명성 강화, 경제 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 완화 및 자생력 향상,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4) 여타 지역 개발 협력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긴요한 분쟁 취약국에 대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원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중점 협력국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공공행정·산업에너지·농림수산 등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공 부문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에 대해서는 물자 지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특별 연수를 통해 역내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전략적 다자 개발 협력 체제 구축 및 이행

우리 정부는 다자개발협력을 확대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양자 협력 노력과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2014년 우리 정부는 주요 유엔 및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약 3,175억 원 규모의 다자개발협력을 시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다자 채널을 통한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우선 2012~2014년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개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기여도를 높였다. 2014년에는 2015년까지 1년 임기의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에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 60% 이상의 식량 원조를 담당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정책 결정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WFP 기본협력협정에 가서명하여 1964년 체결된 한·WFP 수원국 협정을 종료하고 명실 공히 공여국으로서 WFP와의 협력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2~2014년 유니세프(UNICEF)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이 기구의 정책 수립 및 운영 방향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나아가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도하는 Post-2015 개발 목표 수립 방향과 관련한 글로벌 의견 수렴 사업을 전략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등 국제 규범 형성 논의에 기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자개발기구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수립된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s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에 2008년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미국, 프랑스 등 회원국들의 적극 추천으로 2016년 의장국에 선출되었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의 의장국 수임이며, 세계 다자 ODA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공여국 간 논의를 한국이 선도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MOPAN 의장국 활동은 다자 개발 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모범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선진 평가기법 학습 등 한국의 다자 ODA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3) 효율적인 개발협력 사업 방식 추진

(1) 개발컨설팅사업(DEEP) 확대

최근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유효하게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기반 ODA 사업에 대한 개도국들의 관심 및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 외교부와 KOICA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행해 온 정책자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등 기술협력 사업을 2012년부터 ‘개발컨설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DEEP는 기술 협력을 주 투입 요소로 개도국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책기술자문, 제도 구축, 인프라 구축 연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4가지 사업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DEEP 활성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 제도, 시스템 구축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체계화해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컨설팅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내외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해 2013년 2월 ‘개발컨설팅 네트워크(DCN: Development Consulting Network)’를 출범시켰다. 2014년 12월 현재 회원사로 등록된 109개 국내 기관들이 DCN을 통해 우리 개발 경험 확산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DEEP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실적 및 성과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발컨설팅분과회의 개최(4.10)
- 한국산업연구원(KIET) 주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포럼: DEEP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4.11)
-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사업 착수(10.24, DEEP사업)
- KOICA·경찰청 간 개도국 치안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조 약정 MOU 체결(10.28, DEEP사업)
-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Project Action Officer) 양성
 - 개발 협력 및 이공계 관련 전공 지식 및 업무 경험이 있는 청년 인력을 5급 전문가로 선발(2014년 총 60명 선발)
- 개발컨설팅사업(DEEP)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국문(5.2), 영문(11.11))
- 개발컨설팅네트워크(Development Consulting Network) 자문위원회(5.15) 및 정기회의(6.18) 개최
- 2009~2014년 DEEP 사업 규모, 사업 유형, 분야별·지역별·국가별 실적 정리

(2) 공공협력 사업 도입

2014년 외교부는 정부부처 제안 사업 수행에서 부처의 역할과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공협력 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협력 사업은 KOICA가 수행하는 ODA 사업에 부처가 추천하는 특정 공공 기관이 통상의 입찰 절차 없이 KOICA와 공동사업 형태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외교부는 타 정부부처의 분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입찰 및 유찰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및 행정 절차상의 비용을 절약하며, 외교부(KOICA)와 정부부처(산하 공공기관) 간 협업 및 상호 책임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혁신적 개발파트너십 확대

우리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 개발협력기구 참여 외에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혁신적 개발 파트너십(Innova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GAVI에 대한 지원의 경우 우리 정부와 게이트스 재단 간 1:1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ODA의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국제사회 인식도 한층 높이게 되었다.

5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확대

1)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정책 방향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연재해, 인재, 만성형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 인격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즉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총 40여 건의 해외 재난에 대해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예년 수준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된 규모로 인류의 평화와 공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긴급구호 위주였으나 최근 자연재해에 비해 분쟁 및 만성형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구호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리아 내전, 이라크 북부 난민 사태 등 만성형 재난에 긴급구호 지원을 대규모로 제공하였다. 또한 민·군 합동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다.

2)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선진화 방안

우리 정부는 2010년에 마련된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해외긴급구호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먼저 민·관 협력 체제

공고화를 위해 2014년 3월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민간구호단체를 사전에 선정함으로써 해외 재난 발생 시 이들 민간단체가 정부의 재정 지원과 협조를 받아 구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긴급구호 활동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앙119구조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높은 수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3)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

2014년 2월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이후 2014년 12월 3일 현재 총 1만 7,145명 감염, 6,070명이 사망하는 등 에볼라 바이러스의 심각한 확산 사태는 전 세계 위기로 부상하였다. 특히 기니(2,164명 감염, 1,327명 사망), 시에라리온(7,312명 감염, 1,583명 사망), 라이베리아(7,635명 감염, 3,145명 사망) 등 서아프리카 3국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에볼라 대응에 적극 동참하였다. 우선 효율적인 에볼라 대응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 1,26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리 정부는 에볼라 초기 발생 때부터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에볼라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체계화한 방법으로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에볼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피해 지역에 대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17일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에볼라 대응 보건 인력 파견 결정을 발표,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의 의료진을 서아프리카에 파견하는 동아시아 유일의 국가이며, 의료진 파견은 한국 외교의 지평과 국격을 확대 및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파견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조속히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우리 보건 인력 파견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검토와 민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부는 파견 기간 4개월(2014.12.13~2015.4.12) 간 민·군 보건인력 총 30명을 시에라리온 고드리치 에볼라 치료소(ETC)에 3진으로 나누어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파견 보건인력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 공개모집 결과 민간 145명, 군 43명 등 총 188명이 지원하여 모집정원의 6배를 상회하는 등 에볼라 대응에 관한 우리 의료진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볼라 감염 확산과 치사율을 감안할 때 파견 의료진에 대한 안전문제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관심 사안이었다. 정부는 파견 의료진이 감염 또는 고위험 노출 시 후송대책과 치료시설 확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우리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경우 EU 민간항공기 및 군용기를 이용해 에볼라 치료가 가능한 유럽 지역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도 MOU를 체결, 감염환자 후송을 위한 환자 이송 전용 항공기를 확보하였다.

또한 의료팀 정착과 안전한 활동을 위해 정부 지원대를 함께 파견하는 한편 의

료진 임무 종료 후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들은 귀국 즉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건강검진을 포함한 각종 검진을 받고,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21일)에 격리된다.

해외긴급구호대 1진은 12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이들은 영국에서 일주일 동안 특수 교육훈련을 받고 나서 시에라리온 현지로 이동하여 현지 적응훈련을 받은 다음 현장에 배치, 의료 활동에 본격 들어간다.

4) 취약국가 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한국은 인도적 지원 및 평화 구축 노력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무상원조 부문의 전략 목표에 따라 분쟁 후 취약국가²⁾를 위주로 재건 지원 대상국을 선정하여 특별히 지원해 왔다. 중점협력국³⁾을 새롭게 정비한 2011년 이후에는 양자 ODA의 약 30%를 취약국에 지원했다.

특히 2014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차 분쟁·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회의에 참석, 분쟁·취약국에서의 빈곤 퇴치 방안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의 평화 구축 노력에 동참하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제도 구축, 기초 교육, 보건서비스 등 취약국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원의 경우 아프간 정부,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우선순위프로그램(NPPs: National Priority Projects) 분야에 2013~2014년 1억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시

리아에는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No Lost Generation 사업 등 2014년 한 해 동안 약 6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라크의 경우 ISIL 발호로 인한 테러 및 공습 위협으로 원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도적 지원 520만 달러와 함께 KOICA 사업을 통해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약 5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6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 협력

1) 민·관 협력 내실화

범 세계 차원에서의 개발 협력에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는 유효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시민 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DAK 및 DAP를 통한 기업과의 연대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혁신 사업 모델로 개별협력연대(DAK)와 선제적행동프로그램(DAP)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12년 8월에 출범한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여러 회원 기관들의 자발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민·관 협력 체제이다. 전체 250여 개 회원 기관 가운데 4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과모임 및 세미나(DAK TALK)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의 기업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국내외 개발 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선제적행동 프로그램(DAP: Development Action Program)을 도입할 예정이다. DAP는 민간 부문이 보유한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 협력에 반영함으로써 혁신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P는 ODA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에 플랫폼이 되고, 기업의 CSR 및 CSV 재원을 ODA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2)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

정부는 개발 협력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 부문 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간 부문이 보유한 현장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개도국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자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민·관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개발협력연대(DAK)에서 눈에 띈다. 전체 250여 개 회원기관 가운데 시민사회, 학계에서만 186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관 협력 사업이 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DAK는 회원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다른 개발 협력 주체들의 장점과 노하

우를 서로 결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는 혁신형 민·관 협력 방식을 추구한다.

(3)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증진

최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활동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이라는 ODA 본래 목적을 구현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개도국 현지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형 무상원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무상원조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KOICA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2)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지속 운영

우리 정부는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의 국가 대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에 5개 부처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World Friends Korea’(WFK)를 출범시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 및 중장기 자문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봉사단 및 과학기술자문단, 행정안전부의 IT 청년봉사단, 지식경제부의 퇴직전문가봉사단,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평화봉사단 등이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4,426명, 2014년에 4,402명의 WFK 봉사단이 해외로 파견되었다. 2015년에는 4,768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될 계획이다. 외교부는 WFK 통합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통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관계 부처 및 시행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WFK 영월 교육원을 준공, 시행 기관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3) ODA 교육 및 연구 확대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ODA 전문 지식 축적·연구 등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OICA 산하 ODA 교육원과 KOICA 연구개발팀은 개발 협력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ODA 교육원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인식 제고, 원조 관련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조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KOICA의 연구개발팀은 개발협력 정책과 관련된 연구 수행,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 등 ODA 전문 지식 축적 및 전파에 힘쓰고 있다.

제 3 절

전략적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1 개관

오늘날 외교는 수행 주체와 대상이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 NGO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로 확대되었다. 외교 수단도 정치, 안보, 경제 등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문화와 가치, 국가브랜드 이미지 등 소프트 파워 요소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외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지식·미디어·언어·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추진하고 이를 정부 및 경제 외교와 함께 외교의 세 번째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외교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삼고 2011년 9월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2012년 1월 20일 ‘문화외교정책과’를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칭하는 등 공공외교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조성해 왔다. 2013년에는 공공외교역량강화사업 신규 예산(60억 원)을 확보,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0% 증액된 예산(90억 원)을 활용하여 공공외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재외공관이 현지맞춤형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종합 한국홍보행사,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지식·기능 경연을 펼치는 코리아 콘테스트, 현지에서 한국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리아코너, 외국 교과서 내에 한국의 발전상 기술 확대, 외국 내 친한 세력 배양을 통한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 재외공관이 시행하는 다채로운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더불어 ‘청년/시니어 공공외교단’,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개도국 문화꿈나무 등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외교 역량도 적극 활용하였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의 공공외교 경험·사례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공공외교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9월 제1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시작으로 2014년에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한·미 공공외교포럼 등 주요국과의 공공외교포럼도 적극 추진하였다.

외교부는 문화 관련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위원회(2013~2017) 및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2014~2018) 위원국에 당선되고,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 유네스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외교

부에 등록된 민간법인·단체 해외활동지원 등 지자체와 민간의 외교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와 10주년 단위로 외교 관계 수립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9개국과 외교 관계 수립 기념의 해를 맞아 다양한 종합 외교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외교부는 수교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호주 G20 정상회의, 중국 APEC 정상회의, 한·비세그라드그룹(V4) 협력 관계 구축 등 우리에게 외교적 의미가 큰 주요 외교 계기를 맞아 우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행사를 다수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공연, 전시회, 영화제 등 각종 해외문화 행사를 개최, 국가 간 우호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지구촌 곳곳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의 공공외교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별 한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한류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류를 매개로 한 ‘친한(親韓) 인사’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또한 한류·한국문화 확산의 일방향성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문화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역의 문화를 국내에 종합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재외공관에서는 한식행사, 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하고 재외공관청사 및 관저에 우리의 우수한 예술품을 전시하는 등 우리 문화 소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및 국가 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스포츠 외교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2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공공외교

1) 한국형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 수립 노력 강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매우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사회 성장을 이루면서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정책홍보, 지식정보, 기여와 나눔 등 모든 공공외교 영역에서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외교 추진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먼저 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요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공공외교 관점에서 중요하고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큰 베트남, 인도, 호주, 캐나다, 독일, 폴란드, 터키 등 17개국의 일반 대중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중동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을 연

구하였다. 2014년에는 글로벌 경제·사회·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효율적인 공공외교 수행을 위해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성 증진 방안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외교 사업의 수행 주체 다원화 등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 모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과학적 이미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연구 결과를 구체화하여 이를 기초로 ‘한국형’ 공공외교 전략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매력한국 알리기

외교부는 외국 국민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종합 한국 홍보 행사인 ‘매력한국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 캐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106개 공관에서 현지 실정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세미나·강연, 전시·공연, 지역정화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였다.

주중국 대사관은 중국 SNS상 영향력이 큰 파워블로거 등 11명을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 초청, 중국의 최근 관심 분야인 ‘도시화’ 관련 인사 면담 및 한국문화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블로그를 통해 홍보토록 함으로써 관련 소식을 접한 약 7,400만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에 관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였다. 주과테말라 대사관은 주재국 시청 및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인 밀집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고 중심 거리를 ‘서울로’로 명명하여 주재국 내에 한국을 각인시키고 치안을 개선하는 등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 주캐나다 대사관은 지방순회 카라반을 통해 수도 이외 지역의 주정부·의회 인사, 여론 주도층, 일반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캐나다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과 방문 지역 경제인 간의 네트워킹 구축 및 주정부가 한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UAE 대사관은 2014년 10월 한 달 동안(9~29) 수도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2014 코리아 페스티벌 인 UAE’를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 및 공연, 한식, 한국어, 태권도, 의료관광, K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집약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총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한국과 UAE 간 문화 교류 및 우호 친선의 장이 되었다.

3)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사업

외교부는 ‘국민외교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비전 실현에 우리 국민들의 강화된 국제적 역량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공공외교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하였다.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 외교부가 지원하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사업은 공모에 응한 160건 가운데 최종 선정된 7건의 기획자들이 한글, 한식, K팝, 한국문학, 의료봉사, 한반도 통일 등을 소재로 서울,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델리, 덴마크 코펜하겐, 피지 수바 등지에서 각자가 기획한 대로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실행하였다. 또한 창

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청년들을 활용하여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더욱 친근하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2013년 시범사업으로 ‘청년 공공외교단’ 1기에 이어 2014년에도 2기를 출범시켰다. 청년공공외교단 2기는 50명의 국내 외 대학생과 청년 및 유학생들이 10개의 팀으로 나뉘어 영화·음식·패션·문화재 등 10개 주제로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SNS를 활용한 프로젝트 홍보 등 창의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시니어들의 풍부한 국제 업무 및 봉사활동 경험과 식견을 활용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공공외교단’은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산업 시설 시찰, 역사체험캠프, 한국학 총서 배포, 세계민속예술대축제 등 공공외교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학생 및 졸업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문화·예술 영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전문 교육을 시행하는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등 5개국에 총 41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음악·미술·무용 등 다방면에 걸친 무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국정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재외공관에서 약 6개월간 현장실습원 체험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의식을 제고하고 자신의 향후 비전 모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에는 34개 공관에 총 34명을 시범 파견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덴마크 코펜하겐 김치페스티벌 기획자 MBC 인터뷰 내용

하여 현지 공공외교 사업을 측면 지원토록 함으로써 공공외교 참여 기회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외교부는 2012년부터 퀴즈온코리아, K푸드 월드 페스티벌(K-Food World Festival), K팝 월드 페스티벌(K-Pop World Festival), 동영상 콘테스트 등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기능 경연의 마당인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형 공공외교를 실천하였다.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관련 글로벌 퀴즈쇼 ‘2014 퀴즈온코리아’는 해외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국가별 우승자 21명을 한국으로 초청, 여의도 KBS 홀에서 결승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개최된 결승전은 KBS 1TV의 추석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고, 이후 KBS WORLD를 통해 전 세계 100개국으로 송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약 1,500명의 외국인이 국가별 예선전에 참가하는 등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높은 관심이 보였다.

외국인 대상 한식 경연대회인 ‘2014 지구촌 한국의 맛 경연대회(Global Taste of Korea)’는 외교부와 문화방송(MBC),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말레이시아, 칠레, 남아공 등 15개 공관에서 개최된 예선전 우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전주에서 한식 캠프를 가진 데 이어 서울 MBC 홀에서 결승전을 진행하였다. 결승전 진출자들은 전원 한식 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됐으며 본국에서 한식 및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3년부터 외교부, KBS,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창원시 공동 주최

사업으로 진행된 ‘K팝 월드 페스티벌’은 2014년에 60개국 71개 재외공관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15개국 본선 진출팀을 방한 초청하여 창원에서 본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KBS 2TV/World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방영되었다.

2012~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2014년 외국인 대상 동영상 콘테스트는 ‘나에게 한국이란...’을 주제로 진행돼 94개국 7,866건의 작품들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수상작을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 영상은 방송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높이는 등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5) 공공외교 포럼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경험과 우수 사례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외국과의 공공외교 협력 사업을 발굴·시행하기 위하여 주요국과의 공공외교 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중 공공외교포럼과 한·미 공공외교포럼을 각각 개최하였다.

6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에 중국 측에서는 현재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친강 중국 외교부 신문국장, 류더빈 지린대 공공외교학원장, 리융후에 베이징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장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동기 문화외교국장,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전성홍 서강대 교수,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장, 조성대 연합뉴스 기획위원, 문성진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포럼의 3개 세션에서 각각 발제를 나누어 맡고 ▲한·중 공공외교 정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한풍과 한류 ▲한·중 우호의 미래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토의하였다. 제3차 포럼은 2015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7~18일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개최된 한·미 공공외교포럼에는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블레어 루블 우드로윌슨센터 프로그램 부원장, 조기숙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장,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동민 연합뉴스 부국장을 포함한 양측 대표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 국민이 보는 상대국의 이미지 ▲한·미 동맹과 언론의 역할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등 한·미 국민 간의 상호 인식 문제와 공공외교 협력을 위한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협력 강화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공공외교 전문가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6) 코리아 코너(Korea Corner) 설치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 현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대학, 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요 기관에 정보통신(IT) 기술이 접목된 복합홍보관 성격의 코리아 코너를 개설함으로써 현지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리아 코너는 2012년 시범사업으로 3개를 개설한 이래 2013년에 13개(스리랑카, 키르기즈, 요르단, 짐바브웨 등), 2014년에 12개(뉴질랜드, 콜롬비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가 신설되는 등 외국 현지 국민들에게 한국 소개 및 한국에 대한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중앙도서관 내 코리아 코너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술탄대(PSU)
중앙도서관 내 코리아 코너

관심도를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7) 공공외교 친선사절

외교부는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지에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를 활용, 한국 및 한국문화 소개 활동을 전개하는 ‘공공외교 친선사절’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인도의 국민배우 샤루크 칸(Shahrukh Khan), 캄보디아 방송인 타보이(Taboi), 카자흐스탄 국민MC 사비르 바이자코프(Sabyr Baizakov) 등 세 명이 추가로 공공외교 친선사절로 임명되었다. 2012년 임명된 인도네시아 여배우 레발리나 테맛(Revalina S. Temat)과 루마니아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산드루 토메스쿠(Alexandru Tomescu)는 2014년 임기를 연장하였다. 특히 토메스쿠는 2014년 10월 7일 루마니아 국립극장에서 ‘한국문화의 밤(Korean Cultural Night)’ 행사를 개최하고 가야금·장구와 서양악기 피아노·바이올린의 협주 공연을 직접 기획·공연하는 등 한국 문화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8) 공공외교 학술그룹 자문회의

외교부는 국내 대학에서 강의 또는 수학 중인 외국인 교수 및 연구원들 가운데 한국 홍보 의지가 있는 인사들을 공공외교 학술그룹(Scholars Group for Public Diplomacy)으로 선정하고 출신국 언론에 대한 기고 및 연구, 현지 특강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중국, 미국 출신 학자 등 16명을 공공외교 명예사절(Honorary Envoy for Public Diplomacy)로 임명하고 1년간 세 차례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4년에는 15명의 각국 출신 학자들을 명예사절로 임명하고 외국인 대학원생 초청 세미나 등 관련 행사를 세 차례 개최하였다. 명예사절들은 해외에 투사된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평가하고 한글·김치 등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출신 국가별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우리 공공외교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9) 민간외교단체 지원

외교부는 2012년에 비영리법인 업무 체계를 개편한 후 2013년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외교 단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는 한편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2013~2014년 2년에 걸쳐 법인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 7월에 50개의 부실 법인을 정비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간외교 단체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주의

를 환기시키는 한편 역량 있는 민간외교 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민간외교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민간외교 단체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구축된 ‘민간외교단체사이버커뮤니티’ 홈페이지는 편의 기능 지속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외교부와 민간외교 단체의 확실한 소통 채널로 정착하였다.

3 문화를 통한 국가 간 소통 강화

1) 대유네스코 외교 강화

외교부는 주요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의 대외 측면 제고 및 지구촌 행복 시대 촉진 기여 등을 목표로 교육, 문화, 과학 분야 세계 최대 전문 기구인 유네스코와의 호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전쟁 직후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현재는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가운데 13위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핵심 공여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임기 집행이사국, 2013~2017년 세계유산위원회 수임 및 총회 산하 5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주요 사업 및 행정·재정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한·유네스코 간 신탁 기금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

북한 고구려고분 벽화 보존 사업(2000~2013년 총 160만 달러 공여)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문화센터건립 사업(2013~2015년 총 543만 달러 공여 예정) ▲남아프리카 5개국에 중등 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프로젝트(2011~2016년 총 1,000만 달러 공여 예정) 등은 유네스코 내에서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해 유네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유산 등재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2014년에는 남한산성과 농악이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2013년 11월 세계유산위원회 선거에 입후보하여 2013~2017년의 5년 임기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우리 정부는 위원국 수임 기간에 ‘탁월한 보편 가치’를 지닌 인류의 소중한 유산들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 확대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성과 점검 및 Post-EFA 의제 설정을 논의하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5월 19~2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교육 및 문화의 중심 역할을 제고하고, 향후 국제 개발 의제 설정 과정에서 교육 및 문화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 운영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 아래 양자 문화 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각국과 문화 교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자세히 논의,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2014년에는 슬로바키아(11월)와 문화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문화 교류 전반에 걸친 현안과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한·조지아(옛 그루지아) 문화 협



조지아 문화 협정 서명(2014.7.4)



아르메니아 문화 협정 서명(2014.7.4)

정(7월), 한·아르메니아 문화 협정(7월), 한·체코 교육문화교류시행계획서(11월)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문화 교류 협력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였다.

3) 외교 관계 수립 기념 문화행사 개최

외교부는 한국과 수교한 국가와 수교 10주년 단위로 외교 관계 수립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우호 교류의 해, 우정의 해, 방문의 해 등 양자 간의 특별한 주요 외교행사는 물론 독립 200주년, 건국 50주년 등 상대국의 주요 외교 행사 및 APEC, ASEM, G20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맞아 한국 문화사절단을 해당국에 파견하는 주요 외교 계기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이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MIKTA, 비세그라드 그룹(V4), CELAC 등 중견국 및 지역 협력체 대상 문화 행사도 주요 외교 계기 문화 행사에 포함시켜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네팔, 브루나이, 카타르, 오만 등 9개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기념하여 다양한 종합 외교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교류의 해, 호주 G20 정상회의, 중국 APEC 정상회의, 한·비세그라드그룹(V4) 협력 관계 구축,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제정 등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외교 계기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브루나이에서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연출한 ‘난타’ 공연을 개최, 브루나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국과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카타르와 오만에서는 전통 연희, 퓨전국악, 비보이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장르를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등 다양한 한국 문화의 멋과 매력을 소개하였다. 특히 카타르에서는 한식 행사를 통해 한국의 맛을 알리고, 연날리기 및 연만들기 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전통 연에 대한 카타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오만에서는 비보이 워크숍을 개최, 춤을 사랑하는 한국과 오만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네팔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로 태권도 퍼포먼스와 비보이 공연, 관광

사진전, 음식교류전, 조형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네팔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한편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 문화 소개 행사를 개최하였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에는 사물놀이를 비롯해 태권도 퍼포먼스 및 비보이 공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는 각각 국악관현악단과 전통무용팀을 파견한 전통공연, K팝 열기가 뜨거운 라오스에서는 K팝 공연, 싱가포르에서는 퓨전국악 공연과 한·싱가포르 미술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호주에 전통 연희, 퓨전국악, 비보이 팀으로 구성된 우리 문화공연단을 파견하여 호주 주요 4개 도시(멜버른, 브리즈번, 시드니, 캔버라)를 순회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7.27)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이 사랑하는 세계 수준의 성악가 조수미를 캐나다에 파견하여 바리톤 장 프랑수아 라푸앙트, 이무지치 드 몬트리올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 캐나다 클래식 예술가들과 호흡을 맞춘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여 한·캐나다 간의 오랜 우호 관계가 예술 부문에서도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이 언어의 장벽, 인종 차이, 지리상의 원격성 등 장벽을 허물고 정서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간 문화 교류는 다양한 문화

5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3절 전략적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코카서스 문화축제 포스터

종합 소개하는 ‘2014 코카서스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포르투갈어권 영화제’를 통하여 포르투갈어권 6개국(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동티모르)의 9개 작품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였다.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접하기 어렵던 이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류의 일방향성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권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류 확산 및 ‘글로벌 코리아’ 추세에 맞추어 타 문화를 포용하고 문화 공감대를 공유해 나가는 쌍방향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6년 이래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아랍, 흑해 등 우리나라와의 문화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 교류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조지아·아르메니아 등 캅카스(코카서스) 지역의 문화를

5) 한류 확산

외교부는 한류의 문화·경제·외교 분야의 파급력을 고려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한국 영화 및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다. 또 방송사와 공동으로 세계 한류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케이팝·한식 경연대회, 한국 관련 퀴즈대회, 한국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별 한류 현황을 조사하고, 현지 한류 동호회원들이 진행하는 한류·한국문화 홍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류가 수용국에 대한 문화 침투라는 부정 인식을 주지 않도록 최대의 민간 자율로 한류 확산의 전면에 나서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방식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다.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우리의 한식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한식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한식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한식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베트남·네팔·고베·시카고·우간다 등 12개 공관, 2014년에는 예멘·크로아티아·영국 등 14개 공관에서 KF와 공동으로 한식의 글로벌 확산 사업을 시행하여 주재국 외교단 및 정재계·문화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식 제공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법 홍보 및 한식 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등 한식의 국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외교부는 한류로서 파급력이 큰 한국 드라마의 해외 방영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드라마가 방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지매〉, 〈공주의 남자〉, 〈드림하이〉, 〈성균관스캔들〉 등 드라마를 중남미 20 개국에 방영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보급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 드라마의 지속 보급을 통해 우리 콘텐츠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90여 개 재외공관의 한국영화 상영 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영화 홍보와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 영화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토론토 국제영화제, 몬트리올 판타시아 국제영화제,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국제영화제, 인도 첸나이 국제영화제 등 해외 국제영화제에 국내 영화의 출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6)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 외교

현지 예술인 대상으로는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문화공연단을 파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화행사 개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수의 공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리상의 거리와 비용 문제로 국내 공연단 파견이 쉽지 않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도 한국을 소개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문화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자체의 문화행사 추진 역량을 배양하고 우리 해외 예술인의 현지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업의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콩고, 요르단, 니카라과, 온두라스, 우즈베키스탄 등 우리 문

화예술 소개가 쉽지 않던 25개국 26개 공관에서 클래식 연주, 사물놀이, 연극, 회화전, 사진전 등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함으로써 주재국의 주요 인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홍보하였다.

7)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외교부는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우리의 우수한 전통 및 현대예술품을 전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문화 소개를 위한 공관 외 문화행사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공관 내 한국문화 홍보는 제한되어 있었다.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은 공관 및 관저를 활용하여 우수한 우리 예술품을 전시함으로써 방문하는 주재국 정부 인사, 언론인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진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Art Bank) 미술품 임차 지원, 2009년부터 문화재청의 협조 아래 전통공예품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외 공관에 다수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제네바, 스페인, 유엔, 독일, 시드니를 비롯한 20개 공관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로부터 임대한 미술품 158점을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그림 및 도자기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예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코트디부아르 등 7개 공관에는 현지 미술품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문화 이해 제고 및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215개 미술품을 임차하여 36개 재외공관에 지원하였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재외공관 내 미술품 전시 및 관리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여 재외공관에 전시되는 미술품은 그 자체가 우리 정부의 문화외교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외공관과 문화전시장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8)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외교부는 ▲외교부·지방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 ▲상호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국제교류업무 전반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외교부·지자체 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풍부한 국제 감각과 경험을 보유한 재외공관장 역임 간부들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로 활동하면서 ▲해외투자 유치 ▲수출 증대 ▲문화 교류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등의 대외 협력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현재 6개 지자체와 7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의 ▲해외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우호도시 체결 ▲대외 문화 교류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외국 정부·지자체 접촉 시 재외공관의 협조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

의 지자체 간 자매결연·우호도시체결 현황은 73개국 1,089개 도시 1,394건으로, 지자체의 대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류 분야도 문화·예술은 물론 경제·청소년·체육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량 있는 지자체 공연단을 수교 및 주요 외교 계기 기념행사에 파견하고 있다. 2014년 충남 천안시 소속 충남국악관현악단을 베트남 호찌민(7.3), 하노이(7.6) 공연에 파견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 소속 무용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7.25~26) 공연에 파견하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자체의 국제화 역량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9)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외교부는 산하 단체인 KF를 통해 해외의 한국 이해 제고 및 한국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 대학 내 교수직 설치, 객원교수 파견, 한국 관련 학술 활동 및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연구자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펠로십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56개국 143개 대학에 164건의 한국학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37개국 55개 대학에 60건의 한국학 학술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국내외 대학 간 또는 해외 대학 간 실시간 화상강의,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을 통해 해외 27개국 84개 대학에 89건의 강좌를 개설하여 3,251명이 수강함으로써 한국 관련 강의 분야의 다양화와 사업 지역의 다변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이들 강좌의 우수 수강생 15개국 38개교 124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시행, 한국을 직접 경험 하도록 하는 등 사업 효과를 제고했다.

해외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18개국 36명의 해외 학자와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학문 분야별 심층 현장 조사·연구를 지원하였고, 31개국 51명의 한국 전공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를 제공하였다. 또 개도국의 한국학 교수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4개국 5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총 44개 개도국 외교관 47명에게 3개월간의 한국 언어·문화 연수 기회를 제공, 지한(知韓) 외교관 인맥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15개국 41개 대학에서 수학 중인 한국 전공 대학원생 15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6개국 15명의 신진 학자들에게 박사후과정 펠로십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중·고교 학생부터 일반 연구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3건의 한국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및 현지에서 총 11건의 교육자 대상 한국학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9개국의 중등학교 교육자 350여 명에게 한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매년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사에 부응하는 주제로 한국학 특강을 개최하는 KF Lecture Series 사업을 통해 2013년에 아세안 지역의 8개국 15개 대학에서 현지 학계 인사 및 일반인을 위한 한국학 특강을 총 14회 개최하는 등 현지 한국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 지역에 부족한 한국학 교수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유망한 학생들을 국내 대학 석사·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초청하는 아세안펠로십도 신설하였다.

19개국 20개 재외공관이 실시한 20차례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도 주재국의 한국어과 학생들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10) 스포츠 국제 협력

최근 스포츠 교류가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협력, 스포츠를 통한 양자·다자 간 국제 협력 및 스포츠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공공외교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전 세계 57개국 재외공관에서 대사배(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태권무 공연, 청소년 태권도 교류행사 등 스포츠를 활용한 57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협력 및 우리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유엔 내의 유일한 스포츠 기구인 유엔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사무국(UNOSDP)의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SDP: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스포츠와 장애인’ 국제작업반(IWG) 의장국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 장애인 발전과 국제 개발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또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의 봉사단 활동(네팔)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의 봉사단 활동(파라과이)

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등 향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세계태권도연맹(WTF) 등과 협력하여 태권도 사범, 태권도 시범단, 태권도 봉사단 파견 및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 교육학술협력 지원

외교부는 교육부 주관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및 졸업생(동문) 관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긴밀한 협력 아래 각 재외공관을 통해 국가별 초청 인원 배정, 장학생 선발 기준 확정 등 장학생 선발 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한편 졸업생들을 친한 외국인으로 만들기 위해 동문회 지원 등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14년 정부 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은 59개국에서 130명, 대학원 장학생은 130개국에서 757명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국 교육부와 우리 교육부 간 교환 학생, e러닝 기술지원, 기초교육 향상 지원 등 교육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교육 분야의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현재 32개국과 교육 분야 MOU가 체결되었다. 2014년에도 독일, 헝가리, 스위스,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UAE), 브루나이 교육부와 우리 교육부 간 교육협력 MOU가 신규 체결되도록 지원하

였다.

이에 앞서 2003년부터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활동 결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61개국(중복 포함) 247건의 한국 관련 외국 교과서 오류 사항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 4 절

대외 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국제 관계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제법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내용도 심화·복합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하고 다국적 기업, 시민 단체 등 비정부 행위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현재의 국제 관계에서는 국제법 규범에 기반하지 않은 대외정책은 국내외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효과적인 국익 추구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고 안정된 대외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해양, 인권, 안보, 외교영사관계 등 분야와 관련된 국제법 분석을 통해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우리 외교의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국내로도 우리의 국제법 역량을 확충하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2014년 조약 체결

1948년 정부 수립 후 2014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041건(양자 2,393건, 다자 648건)이다.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은 대외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48~1960년 13년 동안 발효된 조약이 101건(양자 65건, 다자 36건)에 불과한 데 비해 2011~2014년 4년 동안 발효된 조약은 296건(양자 257건, 다자 39건)에 이른다.

정부수립 이후 조약 발효 건수 추세

2014.12.31 현재 발효 기준

연도	1948~1960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14	소계
양자조약	65	230	334	325	533	649	257	2,393
다자조약	36	63	93	116	135	166	39	648
총계	101	293	427	441	668	815	296	3,041

2014년에는 양자조약 68건과 다자조약 9건 등 총 77건의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 가운데 사법공조 분야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홍콩과의 수형자이송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5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4절 대외 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서명식
(2014.2.2, 서울)

군사 분야에서는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사우디아라비아 및 폴란드와의 국방협력협정, 인도와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통상 활동의 폭이 한층 확대되었다. 조세 분야에서는 콜롬비아, 페루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되어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가운데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필리핀, 니카라과, 키르기스, 카메룬, 탄자니아, 요르단, 방글라데시, 솔로몬제도, 볼리비아 등과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발효되었다. 여기에 미얀마,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등과 체결한 EDCF 차관협정 및 차관약정이 발효됨으로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다자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대표적으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2014년 6월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또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의정서’ 비준서를 2014년 5월에 기탁하였다.

2 주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제법 기여

우리 외교는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게 정책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국내외 지지를 얻고 정당성과 권위를 획득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 과정에서 뒷받침해 주는 국제법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규율 영역이 확대되고 내용도 심화·복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제법에 들어맞는 논리와 정당성으로 외교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양한 외교 사안들에 대한 법 심층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우리 국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의 참여 및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활동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2014년에도 계속되었다. 우리나라는 제69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10.7~11.14, 미국 뉴욕), 제53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9.15~18, 이란 테헤란)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여러 국제법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일반 국제법의 발전 및 법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유엔국제법위원회(ILC) 위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회 위원,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에 우리나라

라 인사가 재직하는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소재한 평화의 궁에 예술품 ‘웃는 해치’를 기증하였다. 평화의 궁에 대한 우리 예술품 기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치’는 정의와 법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홍보하면서도 평화의 궁에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인사들의 국제사법기구 진출도 활발하다. 2014년 12월에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서 정창호(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 재판관) 재판관이 119개국(유효표 104표) 가운데 73개국의 지지를 받아 17명의 후보에서 유일하게 1차 투표로 당선, 2015~2024년 10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는 1996년 10월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2008년 11월 타계할 때까지 재직한 박춘호 재판관에 이어 백진현 서울대학교수가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백 재판관은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 2023년까지 ITLOS 재판관으로 재직한다. ITLOS 사무국에는 또한 김두영 사무차장이 2002년부터 재직하면서 재판소의 운영과 국제해양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창설된 옛유고국제범죄재판소(ICTY)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권오곤 재판관이 재직하고 있다. 크메르루주의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창설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정창호(2015년 3월부터 ICC 재판관 수임) 재판관이 재직하고 있다.

또 ICTY와 르완다국제범죄재판소(ICTR) 임무 종료 이후 이들 재판소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범죄재판소잔여업무처리기구(MICT)의 재판관

명부에는 박선기 재판관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도 국제법과 관련된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ICC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ICC의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IC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적극 표명하였다.

2014년 4~5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37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체제의 목표와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 완료 보고 및 남극환경보호 노력을 설명하였다. 장보고 기지 건설 완료로 우리나라는 이 기지를 포함한 남극 연구 인프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주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 상주 과학기지와 1개의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을 보유한 극지 연구 강국으로서 극지 연구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현재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국제표준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실종 및 MH17편 격추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과 보안 증진을 위한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2014년 7월에는 MH17 격추 관련 국제민항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MIKTA¹⁾ 공동성명을 채택, ICAO 이사국에 회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 훈련, 안전기금(SAFE fund) 기여 등 국제민간항공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1) MIKTA는 2013년 9월 유엔총회 때 우리나라 주도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출범한 중견국 간 협력 메커니즘

2014년 7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재차 선출되었다.²⁾

우리나라는 1996년 ISA 가입 당시 지리상의 배분 원칙에 따라 구성되는 E그룹 이사국이었으나 2009년부터 주요 심해저 관련 투자국인 B그룹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에 6건의 탐사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 연장 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탐사 이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ISA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고하여 국익의 극대화에 노력함은 물론 국제 심해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14년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101차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에 참석하여 2010년 유해·유독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한 국제 항행에 필요한 국제규범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4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한 이래 서해 및 동해와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일본, 중국과 각각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2015년 한·중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고 선언, 해양경계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외교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

우리 정부는 국내외 학계와의 협력, 국제법 저변 확대, 국제법 관련 실무 노하우 및 정보 공유 등 활동을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을 포함한 각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 아래 정부는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꾸준한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정책에 반영하고, 국제법학계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대한국제법학회와의 각종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또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국제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면서 국제법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9월), 제14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11월)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국제법 관련 실무 및 노하우 공유 차원에서 외교부 주관으로 6월에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관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등 국제문서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계간지도 발간하여 국

5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4절 대외 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제법 관련 주요 문서, 국제사법기구의 최신 판결 및 조약체결 동향, 국제회의의 논의 동향 및 시의성 있는 국제법 논문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양자조약집」 및 「2011~2012년 다자조약집」을 발간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학자, 법률 전문가, 국제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 등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